

# Clarity Act 수정안 공개 이후 쟁점과 전개 방향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디지털자산 김현정 | 2026년 1월 23일 | hyun.k@kiwoom.com

## Clarity Act 수정안 공개 이후 쟁점과 전개 방향

- 미국의 디지털자산 시장 규제 체계 명확화를 목표로 한 Clarity Act의 상원 은행위원회 수정안이 공개. 공개 직후 코인베이스는 디파이(DeFi) 규제 범위 확대와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금지 제한 규정을 지적하며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 표명. 이에 법안 수정 심사 연기되며 규제 불확실성 확대.
- 코인베이스의 반대는 법안 폐기보다는 디파이 규제 완화 및 동사의 USDC를 활용한 예치금 지급 구조가 예외 규정 또는 허용 범위 내에서 인정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 있다고 판단.
- 향후 법안 전개 과정에서 스테이블코인 보유 이자 금지라는 기본 원칙은 유지되나, 코인베이스를 중심으로 활동 기반 리워드 허용 범위와 조건에 대한 조율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

## ◆ 클래티티 법안(Clarity Act) 수정안 공개

- » Clarity Act, 2025년 7월 17일 하원 통과 이후 현재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수정 논의 과정 단계. 이러한 과정에서 지난 1월 10일 하원 통과안을 전면 대체하는 수정안 'Digital Asset Market Structure Draft'가 공개된 상황.
- » 공개된 수정안 역시 기존과 마찬가지로 미국 디지털자산 시장 규제 체계 명확화를 주요 목적으로 하며, 정의 및 분류체계 · 불법금융 대응 · 디파이(DeFi) 규제 등을 포함한 총 9개의 타이틀로 구성. 이에 따라 디지털자산 법적 분류, 중개 및 거래 규제, 디파이(DeFi), 고객 보호 등 시장 전반에 대한 내용이 포괄적으로 담겨 있음.
- » 수정안 공개 직후 시장에서는 Clarity Act가 지난 Genius Act와 유사한 절차를 거쳐 비교적 신속히 처리될 수 있다는 기대가 형성되었음. 법안 통과 시 미국 내 디지털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 체계가 일정 수준 확립될 것으로 예상되며, 은행 등 전통 금융기관의 가상자산 관련 사업 참여 확대 가능성이 부각. 이러한 제도 정비 기대를 바탕으로 가상자산 시장 내 자금 유입 여건 개선과 함께 주식시장에서도 블록체인 및 스테이블코인 활용에 따른 관련 산업 성장 기대감 확대.
- » 해당 수정안은 2026년 1월 15일 상원 은행위원회 수정 심사 단계 진입 이후 상원 본회의 상정, 트럼프 대통령 서명 및 시행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되었음. 그러나, 코인베이스가 법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수정 심사 일정이 연기되었고,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심사 재개 일정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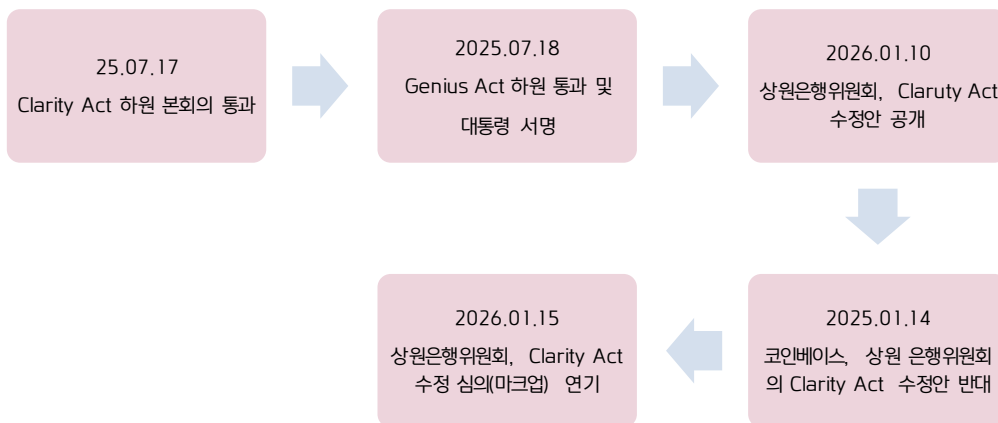
### ◆ 코인베이스의 법안 반대 이유는?

- 》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Brian Armstrong)은 X를 통해 Clarity Act 수정안에 대해 지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  
 그 배경으로 토큰화된 주식에 대한 사실상 금지 가능성, 디파이(DeFi) 규율 강화에 따른 정부의 금융 기록 접근 권한 확대 및 개인 정보 보호 훼손 우려, CFTC 권한 약화 가능성, 스테이블코인 구조 제한 등을 언급.  
 이 중 코인베이스 법안 지지 철회의 실질적인 이유로 작용한 부분은 디파이(DeFi) 규율 범위 확대와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금지 제한 규정으로 판단.
- 》 수정안은 디파이(DeFi)에 해당하는 프로토콜(decentralized ledger finance trading protocol)에 대해 (1)거래가 미리 정해진 자동화 규칙에 의해 비재량적으로 실행되고 (2)사용자 외 제3자에 의존하지 않고 커스터디 등의 구조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규정.  
 반면, (1)특정 개인/집단이 기능 및 운영 합의 규칙을 통제하거나 중대하게 변경할 권한을 가지는 경우, (2)운영·거래·집행이 소스코드에 인코딩된 사전 규칙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3)특정 개인/집단이 이용 제한·검열·차단권한을 일방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할 시 탈중앙화 프로토콜에 해당되지 않는 비탈중앙화 프로토콜(non-decentralized ledger finance trading protocol)로 분류.  
 비탈중앙화 프로토콜에 해당할 경우 기존 증권중개 규정 및 은행비밀법(BSA) 규제 의무 적용.  
 결국, 수정안에 따르면 관리자 등 제3자의 개입이 전혀 없는 순수 DeFi가 아닐 경우 규제 부담 증가될 수 있음.
- 》 아울러 스테이블코인 단순 보유(holding)에 따른 이자 지급을 제한하는 조항 역시 코인베이스가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데 있어 중요한 쟁점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  
 실제로 수정안은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금지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으며, 코인베이스가 현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USDC 스테이블코인 기반 예치금도 보상 역시 규제 적용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 존재.
- 》 수정안 404(b)(1) 조항은 디지털자산 서비스 제공자(DASP)는 결제 스테이블코인을 단순 보유하는 것(holding)과 오로지 연결된 형태(Solely in connection with)로 어떤 이자 또는 수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  
 다만, 404(b)(2)에서는 이자 지급 예외 규정을 두고 단순 보유가 아닌 활동 기반(activity-based) 리워드의 경우 수익 지급이 가능함을 명시.  
 또한, 404(f)(2)에서는 제3자가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보상 혹은 리워드의 경우 발행자의 이자 지급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규정함으로써 상황에 따라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수익 지급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음.
- 》 종합하면, 코인베이스의 법안 반대는 해당 법안의 폐기를 요구하는 것이기 보다는 USDC를 활용한 예치금 지급 구조가 예외 규정 또는 허용 범위 내에서 인정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 보다 가까운 것으로 해석.

◆ 이후 법안 전개 방향은?

- 》 이번 수정 심사 연기는 업권과의 추가적인 협의 과정을 거쳐 조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법안이 폐기될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  
다만, 법안 논의 지연에 따른 미국의 가상자산 규제 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  
그래도 동 법안은 전통 금융기관과 가상자산 업계 모두 제도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만큼, 이해관계자 간 협의회가 조속히 진행될 가능성 존재.  
이 과정에서 앞서 언급했던 디파이(DeFi) 규율 범위와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금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핵심 논의 주제가 될 전망.
- 》 이후 법안 전개 방향과 관련하여 특히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금지는 전통 금융기관인 은행권과 가상자산 업계 간 입장 차이가 가장 분명하고 첨예한 쟁점으로 남아 있어, 향후 조율 과정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음.  
2025년 7월 트럼프 대통령 서명을 통해 제정된 스테이블코인 법안인 Genius Act에서도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금지를 기본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Clarity Act 역시 스테이블코인 보유(holding)에 따른 이자 지급을 제한하는 기본 방향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
- 》 다만, 프로토콜 참여, 거래 또는 네트워크 사용 등에 연계된 리워드 또는 인센티브 형태의 보상에 대해서는 허용하고 있는 만큼, 향후 규제 설계 및 논의 과정에서 코인베이스 등 거래소의 지급 구조가 단순 보유 이자가 아닌 활동 기반 리워드로 해석될 수 있도록 협의회가 진행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  
단, 은행 예금과의 직접적인 경쟁 또는 대체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예금과 유사한 수준의 리워드 지급으로 제한하거나, 거래소 지급 리워드 인정 범위를 한정하는 등의 조건이 함께 부과될 가능성도 상존.

Clarity Act 관련 주요 이슈 타임라인



자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 Clarity Act 수정안 주요 내용 정리

구분	주요내용
법안목적	- 디지털자산에 대한 연방 차원의 시장 구조 규제 체계 확립
규제 방식	- 디지털자산을 증권·상품·부수자산 등으로 구분하고, 각 특성에 따라 SEC와 CFTC 관할 구분 명확화
디파이(DeFi) 관련 규제	- 탈중앙 여부 판단 기준 제시. (1)거래가 미리 정해진 자동화 규칙에 의해 비재량적으로 실행되고 (2)사용자 외 제3자에 의존하지 않고 커스터디 등이 유지 - 비탈중앙 해당 요건 명시. (1)특정 개인/집단이 기능 운영 합의 규칙을 통제하거나 중대하게 변경할 권한을 가지는 경우, (2)운영·거래·집행이 소스코드에 인코딩된 사전 규칙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3)특정 개인/집단이 이용 제한·검열·차단권한을 일방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경우
디지털자산 이용자 보호	- 비탈중앙화 디파이 및 중개자에 AML 의무 적용 - 파산 등의 문제 발생 시 고객 보호를 위한 자산 분리 및 보호 규정 명확화
스테이블코인	- 단순 보유(holding)에 따른 수익(이자) 지급 금지 - 활동 기반(activity-based) 리워드 혹은 인센티브 형태 보상은 허용 - 발행사 외 제3자가 스테이블코인 이용자에게 보상을 지급하는 행위는 발행사의 이자 지급에 해당되지 않음을 명시

자료: Senate Banking Committe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 수정안 내 디파이(DeFi) 및 이자지급에 대한 관련 조문 번호 및 핵심내용

분류	구분	조문번호	핵심 내용
디파이(DeFi)	DeFi 정의	Title III, Sec. 301(a)	- 탈중앙화 금융 거래 프로토콜 정의
	비(비) 탈중앙화 분류	Sec. 301(a)(2)	- 일정 요건 충족 시 'Non-decentralized'로 간주
	규제 적용	Sec. 301(b)	- 비탈중앙 프로토콜에 증권 규제 적용
	AML 적용	Sec. 301(b)(2), (c)	- 비탈중앙 DeFi에 BSA/AML 의무 부과 가능
스테이블코인	기본원칙	Title IV, Sec. 404(b)(1)	- 보유(holding) 기반 이자 지급 금지
	허용 예외	Sec. 404(b)(2)	- 활동(activity) 기반 리워드 허용
	마케팅 제한	Sec. 404(c)	- 예금-이자 오인 표현 금지
	공시	Sec. 404(d)	- 명확한 공시 규칙 마련
	제3자 지급	Sec. 404(f)(2)	- 제3자 지급 ≠ 발행자 이자 지급(단, 지시 시 제외)

자료: Senate Banking Committe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서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